KIPEC
KOREA INTER-PARLIAMENTARY EXCHANGE CENTER

KIPEC 포커스: 전문가 대담

대만해협 정세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KIPEC 포커스 : 전문가 대담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에 대한 전문가를 인터뷰하면서 그 현안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번째 인터뷰로는 미국 현지시각 11월 18일 (화) 글로벌대만연구소(Global Taiwan Institute)의 존 닷슨(John Dotson) 국장을 초청해 '대만해협 정세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닷슨 국장은 미 해군 장교로 20년 복무한 경력이 있으며,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정치전, 중국 인민해방군(PLA) 현대화, 대만 안보를 중심으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가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대만해협 정세의 변화가 한국의 안보 환경과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 워싱턴 내 정책 논의 변화, 중국의 관련 정책, 그리고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1. 최근 워싱턴에서는 대만해협 안보를 둘러싼 논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만해협에 대한 관심이 최근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특정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높아진 것이 아니라, 미·중 관계 악화가 지속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된 흐름입니다. 과거에는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를 불필요하게 긴장시키는 사안으로 여겨져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군사·외교적 공세가 강화되고, 미국 내 기업과 정책권에서도 중국에 대한 회의가 커지면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관심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만 문제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한국이 대만해협에서 갖는 전략적 이해관계는 무엇이며, 현재의 군사·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변: 한국은 지역 안정, 경제 안전, 해상 교역로 보호라는 기본적 이해를 지역 국가들과 공유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해상 물류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대만해협의 불안정이 미치는 영향이 더 직접적입니다. 또한 중국은 핵심 경제 파트너이고, 미국은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양측 관계를 민감하게 조율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활동, 회색지대 전략, 여론전 등 강압적 조치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 불안정을 높이고 한국의 경제·안보 환경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3. 만약 대만해협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패배하는 상황이 온다면, 미국은 한국의 어떤 지원을 기대할까요?

답변: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의 신뢰성과 역내 군사적 영향력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전략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쳐, 기존 동맹 구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외교적 지지와 제한적 후방 지원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상황을 악용하지 않도록 한반도 억제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과 주한미군의 핵심 임무가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대만해협 전투가 아니라 후방 물류·지원, 한반도 안정 유지에 보다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4. 미 의회는 대만 문제에서 보다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취하는 반면[1], 행정부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변: 의회와 행정부 간의 시각 차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의회는 행정부보다 대만에 더 우호적이었고,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양당 모두 중국에 대한 회의가 커지면서 대만 문제에 보다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초당적 성격을 띱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메시지가 기관별로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근저에는 중국 견제라는 큰 공통 맥락이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5. 최근 백악관에서 발표한 팩트시트(Fact Sheet)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2] 한국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답변: 겉보기에는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지만, 한국 정부가 대만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과거 한국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이 사안을 언급하는 데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번 표현은 한국이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질문 6. 일본·호주·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은 대만 안보 환경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들의 대응은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답변: 여러 국가가 중국의 행동에 대해 더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대만에 많은 자국민이 거주하고 있어 더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자국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동훈련이나 안보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모색 중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할지,

---

[1] 올해 1월 17일 미 하원 의원들은 미국이 대만과의 정상적 외교 관계를 재개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인 「대만과의 정상 외교관계 재개 촉구 결의안(H. Con. Res. 8)」을 발의하였다. 이어 5월 15일에는 라자 크리슈나무르티(Raja Krishnamoorthi) 의원과 초당적 공동발의자들이 레이건 행정부 시기 제시된 '6대 보장(Six Assurances)'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만 6대 보장 법안(Six Assurances to Taiwan Act)」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해당 보장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They encourage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and opposed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유지할지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질문 7. 한국이 잠재적인 대만 정세 변화에 대비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옵션은 무엇일까요?

답변: 한국은 이미 지역 안보 환경을 보다 폭넓게 바라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조용한 형태의 군사·외교적 비상계획이 필요합니다. 물류·후방지원, 동맹 조정, 북한 도발 억제 등이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경제는 해상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해협 봉쇄나 중국의 해양 통제 강화 같은 시나리오에 대비한 경제적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한국이 복잡한 전략 환경 속에서 이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 8. 향후 대만해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무엇이며, 한국이 주목해야 할 주요 조기경보 지표는 무엇입니까?

답변: 향후 전면전보다는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과 점진적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공중·해상 근접 활동, 해경의 압박, 심리전 등이 지속될 것입니다. 중국이 부분적·사실상의 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며, 특정 해역 통제나 선박 검문 요구가 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군사·해경 활동의 증가, 해상교통 제한 움직임, 대만 주변 작전 패턴 변화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는 상황이 '압박 단계'에서 '위기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조기 경보가 될 수 있습니다.

KIPEC is registered under FARA. This material is distributed by the Korea Inter-Parliamentary Exchange Center (KIPEC) on behalf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dditional information is on file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